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정재현



“멜버른에선 매년 세 차례 큰 대회가 열린다. 멜버른컵 경마대회와 테니스 호주 오픈, 그리고 멜버른 그랑프리다. 어느 쪽이 더 파급 효과가 큰가를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멜버른 그랑프리는 전 세계에 중계된다. 노출 효과는 셋 중 최고 수준이다.” 2011년 F1(포뮬러 원) 개막전이 열린 호주 그랑프리 에실리 데이비스 운영본부장의 말이다.

경마, 테니스, F1하면 떠오른 도시가 멜버른이다. 멜버른은 인구 380만 명의 시드니 다음 가는 호주 제2의 도시로, 해마다 3종의 대형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1월 열리는 호주오픈테니스대회, 3월에 펼쳐지는 F1 그랑프리, 그리고 11월 개최되는 멜버른컵 경마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 대회들은 모두 세계적인 스포츠로 손색이 없는 수준의 경기들로, 멜버른은 물론 호주를 세계에 알리는 첨병 노릇을 하고 있다.

영암에 집중된 세계 이목

멜버른의 3대 스포츠를 참관하는 관중 수는 연간 100만 명이 넘는다. 지난해 기

준으로 호주오픈 테니스가 60여만 명, F1은 30만 명 수준이다. 하지만, 호주오픈 테니스가 2주간 계속되는 반면, F1 그랑프리는 단 3일간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F1이 테니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평이다.

‘F1’ 지역 성장동력으로 승화시키자

F1이 TV로 전 세계에 중계돼 한 시즌에 6억 명 이상 시청하는 ‘최고의 스포츠 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출 효과는 셋 중 F1이 최고”라는 에실리 데이비스 본부장의 말이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올해 F1의 16번째 대회인 코리아 그랑프리가 오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영암 KIC(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다. 코리아 그랑프리는 올해가 두 번째다. 60년이 넘는 F1의 역사에 비하면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다.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멜버른 F1과 비교해 도 일천(日淺)한 역사다. 대회 운영에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다.

같은 일을 꿈이라도 꾀본 적이 있는가. 유사이래 전남이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이목을 끌 것이라고 생각이나 해봤는가. 영암과 전남이 외국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 본 일이 있는가. 적자 문제도 그렇다.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떠올려보자. 막대한 개최 비용의 논란은 있었지만, 우리는 엄청난 반사이익을 챙겼다. 한국에 대한 인지도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며 경제활동 곳곳에서 활력 넘치는 촉진 작용이 일어났다. 올림픽과 월드컵이 ‘코리아 브랜드’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킨 토대가 된 것이다.

영암 F1의 두 번째 대회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준비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민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그래서 영암 F1을 확실한 지역의 ‘희망의 근거’, ‘대표 브랜드’로 반드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

나후 탈피 절호의 기회

무엇보다 광주·전남에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신감이다. 방향 전환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정치적 소외와 경제적 낙후라는 숙명에서 탈피하는 모멘트, 즉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 스스로 찾아야지 결코 남이 가져 주지 않는다. 그렇다하면, 영암 F1은 의심할 여지없이 절호의 기회다. F1 영암 대회는 세계 속에서 광주·전남지역 브랜드와 기업 브랜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최고의 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민이 영암 F1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F1 머신의 폭발적인 역동성과 속도감을 광주·전남의 성장동력으로 승화시켜보자. 호남인의 자력이라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올해 영암 F1이 끝나고 ‘F1팀들, 썩스모텔에 떨어지다’가 아닌 ‘F1팀들, 광주·전남의 맛과 멋에 흠뻑 취하다’라는 헤드라인이 외국 언론에 장식되기를 기대한다.

〈논설실장〉 jhjung@kwangju.co.kr

은편칼럼



김병인

장개석(1887~1975)과 모택동(1883~1976)은 근대 중국의 양대 거두이다. 1945년 항일 전쟁 승리 이후 두 인물은 처절한 국·공 내전 끝에 공산당의 모택동이 대륙을 장악하여 새로운 중국을 세웠고, 장개석은 패하여 후일을 기약하면서 대만으로 쫓겨 가게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중국에서 별이 되었다. 중국 대륙의 곳곳에 모택동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현대 중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영

웅이 되었다. 장개석은 대만에서 국부로 추앙받고 있다. 두 인물이 각각 중국 대륙과 대만의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 모두 신분에 맞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이다. 모택동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듬해인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내 아들을 조선에 지원병 1호로 보내겠다”며 당시 모스크바대학 유학생이던 만아들 모안영을 불러들여 그 해 10월 중국인지원군에 자원입대하도록 하여 6·25전쟁에 참전시켰다. 모안영은 당시 결혼 1년차의 신혼이였다. 모안영은 6·25 참전 한 달 뒤인 1950년 11월 미군의 폭격에 의해 사망하였다. 사후 그는 평안남도 회령군 ‘중국인지원군 열사능원’에 묻혔다. 최고위층의 자제였지만 사

노블레스 오블리주

후에도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다. 장개석은 1948년 말 국·공 내전의 패색이 짙은 가운데 그의 만아들 장경국에게 비밀리에 상해, 남경 등지의 금, 은, 보화 및 외화를 대만으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 장경국은 상해의 회화강가에서 공산군과 대치하던 위급한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이 사실을 눈치챈 공산군이 상해항을 떠나는 배를 향해 대포는 물론 총까지 쏘아댔다고 전해지니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알만하다. 그때 대만으로 옮겨진 금, 은, 보화 및 외화는 5억 달러 이상으로 알려졌고, 훗날 대만의 부흥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개석은 대만으로 물러간 뒤 거거를 반상하고 밀수에 연루된 머느리까지 처형하면서 부정, 부패를 일소하고 국가를 개편하여 타이완의 경제발전을 실현시켰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신는 코너입니다.

기고



정선수

IT, BT, NT를 이어받은 산업분야를 선정하라는 질문에 미래학자 대부분은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를 꼽는다. 스마트그리드는 전기의 생산, 운반 및 소비과정에 정보통신분야를 접목, 공급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인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이다. IT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전력 송배전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 전체에 전력망이 갖추어져 있고 IT기술이 발달한 모든 국가는 스마트그리드를 미래 먹거리 창출산업으로 인식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

빛고을 광주에 딱 맞는 스마트그리드

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10년 1월 국가 로드맵을 확정발표하였으며, 기본법안인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올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스마트그리드 사업추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광주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동안 육성해온 지역산업과 연계하고,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이전,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계기로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반면, 지난 1월 27일 광주·전남 스마트그리드 발전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3월에는 광주·전남 스마트그리드 TF 발족과 동시에 스마트그리드 광주·전남지회를 창립하고, 4월에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정책연구회를 발족하고 이상적인 에너지통합관리

시스템에 관한 기획연구를 추진해 보고서 정부에 제출하고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전국규모의 스마트그리드 산업육성 세미나를 개최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도시 에너지 통합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활발한 토의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산업육성 측면에서 광주의 활동방향은 머지않아 공고될 ‘스마트그리드 시범지구 지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시범지구는 그동안 실증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고 전국 단위에 확대 적용하는 전 단계로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기술을 보완하는 등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범지구에는 스마트 계량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저장 및 DC 전원기술 등 스마트그리드의 핵심기술이 총망라되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에게 에너지사용량이나 요금 등 전력사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에너지절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저전력 냉난방기기 및 스마트 가전기기 등의 전력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한 가정용 수요반응(Home Demand Response)에 관한 제품개발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력선 통신기술과 이를 이용한 부가 서비스개발 등이 추진될 것이다. 광주가 시범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획위원회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역에 적용하고, 국가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활발히 해야 한다.

광주는 그동안 육성해온 광산업, 가전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전자산업과 ICT산업을 융합하고, 광주연구개발특구를 스마트그리드 특구로 발전시키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과 협력해 빛고을과 딱 맞아떨어지는 스마트그리드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빛고을 광주를 성원하고 응원을 기대한다.

〈광주시 경제산업국장〉

대학 전형료 입시장사, 학부모 부담 생각 봤나

201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가 마감되었는데 어느 해보다도 경쟁률이 높다. 각 대학들은 엄청난 전형료 수입에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고 한다. 반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물가고에 비한 등록금에 전형료까지 가계에 큰 부담을 받아 어깨가 휠 정도다. 도대체 대학들은 언제까지 입시장사를 하며 수입 올리기에만 열안이 될 것인가. 논술과 심층면접을 치르는 대학들은 6만 5000원~7만원선, 그냥 입시자료만 보는 대학들은 3~5만원을 받는다. 대학마다 수시대 일의 경쟁률을 감안하면 수십억 원의 전

형료 수입을 올리는 셈이다. 더구나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올 수능시험이 쉬워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적어도 한 학생당 7~8개 대학에 지원해 전형료만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까지 들어가게 된다. 지방수험생들의 경우 서울소재대학에 지원할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포함하면 백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금액이 소요되게 된다. 어떻게 자신의 대학에 지원하는 아직 소득도 없는 학생들에게 수만원의 전형료를 받는 것일까. 또한, 이 전형료 수입을 대학들은 입시관리수당으로 나누어 먹고 회식도

하며 대학홍보비로 쓰기도 한다니 과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지출해도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 과연 대입전형료는 언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질지 궁금하지만 하다. 또 입만 벌리면 자율성을 외치는 대학이 과연 그 자율이 다수의 공감을 받는지,

대학이거주의에 집착한 것인지 검증을 해야 한다. 대학 스스로 경제난과 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꼭 필요한 비용만 받도록 노력해야하며 정부와 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객관적 전형료를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정렬·광주시 서구 회장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위기의 대불산단, 정부·지자체 지원 나서야

전남지역 조선 전문단지인 대불산단이 대형조선소의 수주 감소와 중형조선소의 붕괴로 연관 업체들이 잇따라 몰락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올 상반기만 20여 개의 공장이 경매에 나왔는가 하면, 업체 대표의 야반 도주가 속출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대불산단 내 입주업체 가운데 부도로 인해 경매에 나온 물건이 지난 2009년 3개사에서 지난해 10개사, 올 상반기 20여개사로 크게 늘었다. 목포지역의 부도율은 지난 2007년 0.51%(229억 원)에서 2008년 0.90%(400억 원), 2009년에는 0.66%(277억 원)로 다소 감소했지만 전국 평균 0.14%보다 5배 가량 높은 수치다.

임금과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업체 대표가 야반도주하는 사례도 연간 수십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올들어 8월 말까지 목포권 사업체

의 임금체불이 총 1920건에 65억9000만 원에 이르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470건, 54억8000만 원)보다 20%나 증가한 것이다.

대불산단의 위기는 무엇보다 무리한 사업 확장에 있다. 2006~2008년 상반기 조선업계가 최대의 호황을 맞으면서 시설 투자와 신규 진출이 봇물을 이루었으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며 수주 물량이 급감한 때문이다.

전남의 성장동력으로서, 서남권 유일의 특화단지인 대불산단이 휘청거리는 것은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 도 저해가 아닐 수 없다. 대불산단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은 지역 내 조선업체의 합병과 특화전략을 통한 자구책 마련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남도는 요트와 잠수정 등 특화기재재 생산과 첨단업종으로의 전환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불신 받는 호남 지방의회

광주·전남 지역민 10명 중 7명이 지방의회를 불신한다고 한다. 주민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은 지방의회가 과연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회의감이 든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9.1%가 지방의회에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도 10점 만점에 4.67점으로 겨우 과락을 면한 수준이다.

특히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권 주민의 73.1%가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 전국 최고치를 보였다. 지방의회의 주민 의견 대변 정도에서도 64.4%가 부정적 견해를 보여 역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지자체 단체장의 견제 부문 역시 지역민 57.7%가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한마디로 지역민의 눈에는 호남 지방의회가 전혀 제구실을 못하는 ‘있어서 오히려 불편한 존재’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지방의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은 의원들의 자질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처신은 거의 ‘막장’ 수준이다. 특하면 폭행·폭언 사태가 터지고 비리나 부정, 심지어 절도나 사기 등의 범죄로 구설에 오르지 않은 날이 드물다. 지방 의원들이 과연 주민 대표로서 자질이 있는지 심히 의심이 된다. 지방의원들이 갈수록 중앙정치로 관심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도리어 안하무인의 ‘지방관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도 불신의 원인이 된다. 지방의원들이 갈수록 중앙정치에 몰두하는 모습은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래선 풀뿌리 민주주의는 설 땅이 없다. 지역발전도 그만큼 더뎠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를 이대로 뒀선 안 된다. 지방의원의 스스로 각성이나 자정(自淨) 능력에 기대할 것이 없다면 지역민이 나서 응징하는 것뿐이다. 지방자치체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無等鼓

한 선비가 과거공부를 하는데 흰 수염이 나도록 번번이 낙방하는 바람에 가산이 기울고 아내를 돌려주고 가솔에 버렸다. 죽을 작정을 하고 대를 보며 동아줄을 매어놓고 생각해 보니 자신보다 못한 이들이 줄줄이 과거에 급제한 것이 너무도 억울해 이대로는 죽을 수가 없었다.

이에 옥황상제에게 그 이유를 따지기로 했다. 뜻밖의 질문을 받은 옥황상제는 즉시 정의의 신과 운명의 신을 불러 술시합을 시켜놓고 선비에 대를 가다짐을 받았다. “정의의 신이 더 많이 마시면 네가 분개한 것이 옳고, 운명의 신이 더 많이 마시면 네가 체념하는 것이 옳다.”



결국, 술시합에서 운명의 신이 일곱 잔을 마시고, 정의의 신은 석 잔밖에 마시지 못했다. 옥황상제는 말했다. “세상사에는 불합리한 운명의 장난이 꼭 따르는 법이다. 하지만, 3할의 정의도 행해지는 법이니 운수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비를 타이웠다.

중국 괴이 문학의 걸작으로 꼽히는 /홍행기 정경부차장redplan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경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재무부 2200-621 체 육 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전 산 팀 2200-68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